

군사 개입이나 제재냐...미국, 이란 대응 고심

이란 유혈 시위에 美,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 논의
군사 개입 현실적 어려움...사이버 공격·제재 검토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와 관련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군사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는 있으나, 백악관 내부에서는 비군사적 압력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란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군사 공격 외에도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강화, 시위대에 대한 간접 지원 등 여러 선택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핵시설 타격보다는 시위 진압에 관여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치안 조직, 관련 인프라를 겨냥한 제한적 타격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군사·정보 역량을 감안할 때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실패할 경우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군의 전력 배치 현황도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배치돼 있지 않고, 주요 미군 전력과 방어 시스템 상당수가 카리브해나 미 본토, 한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다. 이로 인해 공습이나 미사일 타격을 감행하려면 인접 국가들의 기지 협조가 필요한데,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감안하면 관련국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의 반격 능력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란은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공격 대상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의 군사 공격이 오히려 이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강경 노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이란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주(駐)유엔 이란대표부는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과 환상은 정권 교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제재와 위협, 계획된 소요와 혼란은 군사 개입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범죄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은 자기 땅을 지킬 것이며, 이러한 술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 차단 무력화, 위성 인터넷 지원 등 비군사적 압박 수단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역시 단기간에 유혈 사태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이 해외 군사개입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향후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군사적 압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과 거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 중 거리에 차량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사이버 공격과 기술 지원을 통한 압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적 해법 역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이란의 최대 쌀 공급국인 인도의 쌀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이란에서는 경제난으로 보름 넘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이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 1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연합뉴스

흑인 인권운동 불 지핀 콜빈 별세

1955년 백인에 자리 양보 거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촉발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처음으로 거부하며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불을 지핀 클로텟 콜빈(사진)이 13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86세.

클로텟 콜빈 재단은 콜빈이 이날 텍사스에서 자연사했다고 그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다.

콜빈은 15살이던 1955년 3월 2일 미국 앨라배마 몽고메리의 한 버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콜빈은 흑인 전용석인 뒷좌석에 앉아있었고, 버스 기사는 백인 전용석인 앞자리가 꽉 찼다며 콜빈에게 자리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콜빈은 버스 기사의 명령을 거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콜빈을 버스에서 끌어냈다. 이후 그는 흑백 분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흑인 인권운동 ‘몽고메리 버스 보이



콧’의 단초가 됐다. 콜빈은 지난 2021년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유를 향한 마음 가짐이었다”며 “나는 그들에게 ‘역사가 나를 이 자리에 묶어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콜빈은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하지 않은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며 2021년 법원에 범죄 기록 말소를 요청했으며 판사의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콜빈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스티븐 리드 몽고메리 시장은 콜빈의 행동이 “미국을 바꿀 운동의 법적, 도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그를 추모했다.

/연합뉴스

사우디·이스라엘, 美에 이란 공격 자제 촉구

정치·사회적 혼란과 불안정 경계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라이벌인 일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테헤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자제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 NBC뉴스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결정적인 효과를 거둘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현직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이란 체제가 아직 치명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당분간 대규모 군사 행동을 보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일부 국가는 이란 정권이 더 한계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내 시위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외부 개입이 오히려 정권의 항쟁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랍권 외교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해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란 사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강경 노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 정권 교체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의 군사 개입이 반정부 시위대의 움직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통신 지원, 사이버 공격, 제한적 군사 행동 등 비군사적 또는 저강도 대응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 유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차질 가능성이 주요 우려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이란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불안정도 경계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 내 시위 확산 가능성과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이란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미군의 이란 공습을 위한 영공 제공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주사우디 미 대사 마이클 래트니는 “사우디는 이란 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불안정을 싫어한다”며 “체제 교체는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노동자 안전 우선” 인도, ‘10분내 배달’ 없앤다

블린키투 등 인도의 킥커머스(배달) 업체들이 노동자 안전을 중시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주문 이후 10분 이내 배달’ 약속을 폐기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린키투와 젬토, 스위기 등 인도의 일부 배달 업체들은 최근 만수쿠 만다비야 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식재료와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 요구를 아직 수용하지 않은 업체들도 블린키투 등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정부의 이번 요구는 지난달 말 배달 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 뒤 나온 것이다.

블린키투의 경우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주요 홍보 문구인 ‘10분 이내 1만여개 상품을 배달했다’에서 ‘10분 이내’란 표현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